

##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전체주의에서 후기전체주의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우영\*\*·안경모\*\*\*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유형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및 사회통제 일반과 관련한 기존의 이론과 개념을 활용하여 북한의 사회통제 유형을 개념화 하려 시도했다. 주지하듯 1990년대 이전 북한은 주입식 사상교육과 테러, 공포정치 등 전체주의 체제에서 두드러지는 강압적이고 강제적이며 자의적인 유형의 ‘부정적 사회통제’ 기제를 주로 활용하여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계획경제 및 배급제가 붕괴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북한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 이러한 변화와 결부된 사회통제 유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사상, 생활, 행동의 각 영역에서 후기전체주의적 사회통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의적·보상적·법제적 방식의 ‘긍정적 사회통제’ 유형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북한, 김정은, 전체주의, 후기전체주의, 긍정적 사회통제, 부정적 사회통제

\* 이 글은 필자의 석사 학위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전체주의에서 후기전체주의로의 변화를 중심으로”(국방대학교, 2018)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국방부 육군소령(진).

\*\*\*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부교수.

## 1. 서론

2011년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후계자 수업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연소한 후계자 김정은이 보여 준 행보는 장성택 처형을 비롯한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 대남 도발,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대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북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주로 제재와 압박의 효과와 그에 따른 일련의 급변사태론에 집중되었다.<sup>1)</sup> 그러나 현재까지 김정은은 제4차 당대표자회, 제7차 당대회,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등 나름의 방식으로 체제를 정상화하고 자신들의 정책목표를 실현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한국, 미국, 중국 등과의 전격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담판을 시도하고 있다. 정권 초기에 있었던 많은 우려와 달리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통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이의를 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급변사태의 프레임을 벗어난 오늘의 북한에 대한 향후 연구는 아마 ‘있는 그대로의 북한’, 특히 ‘나름의 상당한 변화를 겪어온 김정은 시대의 북한’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 변화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북한 사회통제 유형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문헌연구와 함께 북한이탈주민<sup>2)</sup> 인터뷰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이를 체

---

1) 북한을 둘러싼 급변사태론의 추이와 논리에 대해서는 안경모, “북한급변사태 논의의 역설: 간과된 변수로의 ‘북한,’” 『국제관계연구』, 21권 2호, 31~60쪽 참조.

2) 인터뷰 대상자는 2017년 이후 탈북한 20~50대 남·여(15명)로 구성되었으며, 1:1 인터뷰를 통해 결과를 획득하였다.

계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유형이 강제와 강압, 자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체주의적인 유형에서 동의와 보상, 법제화를 특징으로 하는 후기전체주의적 유형으로 일정 부분 변화하고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먼저 전체주의와 후기전체주의, 긍정적 사회통제와 부정적 사회통제 등 논문의 핵심 개념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사상, 생활, 행동의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실제 사회통제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 2. 개념과 분석틀

### 1) 전체주의와 후기전체주의

본 연구에서는 카를 프리드리히(Carl Friedrich)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의 전체주의 개념과 후안 린츠(Juan J. Linz)와 알프레드 스테판(Alfred C. Stepan)이 정립한 전체주의, 후기전체주의 개념을 활용하여 북한의 사회통제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는 전체주의를 “현대의 정치·기술적 조건에서 전체주의자들의 의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통제체제”라고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6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다. ① 공식적 이데올로기, ② 1인(독재자)에 의해 지도되는 단일정당, ③ 당과 비밀경찰에 의한 물질적 또는 정신적 테러체계, ④ 대중매체에 대한 독점적 통제, ⑤ 무장전투력 독점, ⑥ 경제에 대한 중앙통제체제가 바로 그것이다.<sup>3)</sup> 린츠와 스테판은 하나의 이념형으로서의 전체주의에 대한 프리드리히

와 브레진스키의 이와 같은 규정이 갖는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보다 현실화하고자 했다. 특히 그들이 주목한 지점은 상기한 개념규정이 변화와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탈스탈린화 이후 나타난 사회주의 국가들의 분화, 즉 더 이상 전체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권위주의, 민주주의 등 기존의 개념들로도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현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후기전체주의라는 개념은 바로 이와 같은 고민의 산물이었다.

린즈와 스테판은 전체주의에서 후기전체주의로의 변화가 상호 연관된 다음의 세 가지 동인에 의해 추동된다고 주장한다. 지배자에 의한 신중한 정책의 결과물(선택에 의한 탈전체주의화), 전체주의적 구조의 내적 침식과 간부들의 이데올로기적 신념 약화(쇠퇴에 의한 탈전체주의화), 전체주의적 통제에 저항하고 회피할 수 있는 사회·문화·경제적 공간 창조(사회적 점유에 의한 탈전체주의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동학 속에 출연한 후기전체주의는 전체주의 체제의 기본적 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새롭게 발견된다.<sup>4)</sup> ①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존재하나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헌신과 신념은 점차 약화되며, 제한적이지만 합리적 정책결정에 기초한 실용적 함의로 강조점이 전환된다. ② 카리스마적 리더십 보다는 국가기술관료주의적 리더십 대두되며, ③ 통제 메커니즘은 유지하지만, 정치적 정당성 결여로 인해 강압적 기제 사용이 완화된다. ④ 동원

---

3) Carl J. Friedrich,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4th ed.(New York: Praeger, 1964), pp.20~40.

4)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Washington D.C.: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pp.42~51.

참가자의 열의는 약화되고, ⑤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발견된다. ⑥ 정치 부분을 제외한 사회적 다원주의가 증가하며 ‘2차문화’가 등장하고, ⑦ 경제에서의 온건한 개혁이 이루어지며, ⑧ 법·제도주의가 강화된다.

## 2) 사회통제 개념과 유형

사회통제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는 ‘사회구성원의 일탈행위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제재’를 의미한다.<sup>5)</sup> 여기서 비공식적 제재란 사회구성원 상호간 이루어지는 비난·처벌 등의 사회통제를 의미하며, 공식적 제재란 범죄라고 규정된 일탈행위를 한 사회구성원에 대해 국가적 통제기구를 활용한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sup>6)</sup>

사회통제는 다원주의, 이데올로기, 동원, 리더십이라는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는 린츠와 스테판의 유형학에서 독자적인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후기전체주의 사회의 특성에 대한 여러 설명 속에 사회통제와 관련한 내용은 다양한 형태로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회통제 영역에서의 후기전체주의적 특성, 그중에서도 특히 통제의 ‘방식’과 관련한 부분이 아널드 로즈(Anold M. Rose)의 긍정적 사회통제(Positive Social Control)와 부정적 사회통제(Negative Social Control)라는 개념을 통해 보다 명확히 포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사회통제와

---

5) Albert K. Cohen, *Deviance and control*(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6),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 통제체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99권 11호 (1999), 4쪽 재인용.

6) 이우영, 위의 글, 5~6쪽.

관련된 개념과 논의를 크게 사회통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한 논의, ‘대상’과 관련된 논의, ‘방식’과 관련한 논의로 나누어 본 연구의 접근법을 보다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다.

먼저 사회 통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사회통제와 질서 문제를 ‘기능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합의적 관점, ‘사회적 강자의 강제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보는 갈등이론적 관점, ‘개인과 타인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접근하는 상호작용론적 관점이 존재한다.<sup>7)</sup> 이 중 갈등이론적 관점은 권력자가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운영한다는 개념에 입각한다.<sup>8)</sup> 이는 사회통제를 지배·피지배 관계 속에 ‘특정집단이나 계급이 지배구조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동원하는 기제’로 보는 것이다.<sup>9)</sup> 본 연구는 북한 사회통제를 갈등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따라서 ‘지배자가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고 피지배자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제재’를 ‘사회통제’로 정의한다. 이는 북한을 어떤 체제로 정의하건 여타의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사회통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회통제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크게 인간의 정신·문화·이데올로기를 통제하는 것과 구체적인 생활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0)</sup> 본 연구는 북한 사회통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공식적 이데올로기와 억압적 주입을 통해 인간의 정신

---

7) 심영희·전병재, 『사회통제의 이론과 현실』(서울: 나남출판, 2000), 32~40쪽.

8) 박영신, 『사회학이론과 현실인식』(서울: 민영사, 1990), 165쪽.

9)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6쪽.

10) Louis 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 이상훈 옮김, 『레닌과 철학』(서울: 백의, 1995); 정영철, “북한 사회통제 메카니즘의 변화와 특징,” 『통일문제연구』, 9권 2호(1997), 52쪽 재인용.

을 통제하는 ‘사상영역 사회통제’, 동원과 조직생활, 배급제, 생활총화, 성분정책 등을 통해 인간 생활을 통제하는 ‘생활영역 사회통제’, 사회주의 법과 집행기관, 공개처형 등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행동영역 사회통제’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통제의 ‘방식’과 관련한 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널드 로즈는 사회통제 유형을 그 방식에 따라 긍정적 사회통제와 부정적 사회통제로 구분한다. 로즈는 사회통제를 ‘사회가 문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처벌과 보상’이라고 정의하며, 집단과 구성원 또는 하위집단과의 관계에 따라 적합하고 효율적인 통제 형태가 따로 존재한다고 강조한다.<sup>11)</sup> 즉 사회통제는 양방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관계유형에 따라 적합성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그는 사회통제 유형을 보상(상·명예·급전·직위·칭찬 등)으로 대표되는 ‘긍정적 사회통제’와 처벌(경고, 벌금, 투옥, 강제노동, 고문, 사형 등)로 대표되는 ‘부정적 사회통제’로 구분했다.<sup>12)</sup> ‘부정적 사회통제는 긍정적 사회통제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적용범위가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 긍정적 사회통제는 불확실한 대신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인간을 순응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sup>13)</sup>

---

11) Arnold M. Rose, *Sociology the study of human relations*(New York: Alfred A. Knopf, 1957), p.115.

12) Arnold M. Rose, *Ibid.*, p.126.

13) Arnold M. Rose, *Ibid.*, pp.126-148.

### 3) 분석틀 및 주장

북한은 1990년대 이전까지 사상, 생활, 행동에 대한 강제적, 강압적, 자의적 통제로 특징지어지는 ‘부정적 사회통제’를 활용하여 체제를 유지해 왔다. 강제적 통제란, 세뇌교육과 선전선동을 통해 공식적 이데올로기를 인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킴으로써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사상적 통제 기제로 사용함을 의미한다. 강압적 통제란, 인민들을 조직에 속박하고 동원 및 생활총화를 통해 일상영역을 강압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생활영역을 통제하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자의적 통제란 사회주의 법 위에 존재하는 당과 수령이 행동영역에 대한 통제 기제를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로즈의 이분법적 사회통제 유형에 따르면, 약화된 ‘부정적 사회통제’를 대체할 수단은 ‘긍정적 사회통제’의 활용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사회통제 각 영역에서 기존의 부정적 사회통제와 더불어 ‘동의적·보상적·법제적으로 대표되는 긍정적 사회통제’를 활용함으로써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데올로기는 제한적이지만 실용적 합의로 강조점이 전환된다. 이는 일방향적 ‘강제’로부터 ‘강제와 동의’가 배합된 양방향적 합의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인민친화적 리더십은 인민에 대한 ‘동의적’ 기제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에서의 온건한 개혁은 장마당에 대한 통제 완화, 복지·문화시설 설립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보상적’ 기제를 통한 사회통제를 의미한다. 강압적 통제 완화와 법·제도주의 증가는 북한에서 ‘공포정치의 이원화’, ‘사회주의 법에 대한 전면적 개정’을 통해 나타나며, 이는 과거의 자의적 통제보다 비교적 정제된 ‘법제적’ 통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북한은

<표 1> 전체주의 / 후기전체주의 사회통제와 그 유형

구분	사회통제 유형의 변화			북한 사회통제 기제
	전체주의 부정적 사회통제	1990년대	후기전체주의 긍정적 사회통제	
사상	강제적 통제	⇨	동의적 통제	이데올로기, 교육·선전선동
생활	강압적 통제		보상적 통제	계획경제·조직생활·성분정책
행동	자의적 통제		법제적 통제	사회주의 법, 공포정치

과거 강제적·강압적·자의적 사회통제 기제를, 후기전체주의체제의 특성이 반영된 동의적·보상적·법제적 사회통제 기제로 변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은 이와 같은 본 논문의 분석들과 주장을 정리한 결과이다.

### 3. 사상영역 통제 변화

#### 1)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념 약화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는 기점은 그들이 처한 현실이 이데올로기가 제시하는 유토피아와 극명하게 대비될 때이다. 북한 지배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은 1982년 3월 김일성 탄생 70돌 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통해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sup>14)</sup>이라고 정의되었고, 1985년 7월

14) 김정일, 『김정일선집』 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에 이르러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를 통해 체계화되었다. 주체사상은 대외지주성 원칙과 혁명적 군중노선을 바탕으로 자주적 국가발전전략으로 출발함으로써 강력한 호소력을 확보하였고, 이후 김일성 정권이 안정됨에 따라 공식적 이데올로기로 발전하였다.<sup>15)</sup> 특히 1986년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통해 제시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수령과 대중의 유기체적 결합을 강조함으로써 수령에 대한 절대충성과 집단주의의 생활원리를 이론적으로 보완하였다.<sup>16)</sup>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고화된 이데올로기는 사상교양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입됨으로써, 전체주의 사회통제 기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뿌리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발생한 이데올로기와 현실 간의 괴리는 이데올로기적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이탈주민 인터뷰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념 약화 현상은 지역과 나이에 따라 소폭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비교적 쉽게 관찰된다.

“똑같이 산다는 건 허울뿐인 거예요 [...] 입조심 해라 괜히 죽을 수 있다 [...] 참자 참자 해서 사는 거예요 [...] 이제는 그러니까 당의 목소리나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사회주의는 빈부차이는 없다 개나발이나 해라 하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김정일 애국주의요 뭐요 하라 하니까 죽지 못해 따라 하고”(부산, 2018.10.3., 남성 2).

“2009년도 화폐개혁 하면서 그때 사람들 많이 녹았지요. 국가로서는 믿으면 안 되겠구나. 여는 행정일꾼도 아니고 검찰소 검사들 이런 사람들

15)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38쪽.

16) 김정일, 『김정일선집』, 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이 강연을 했어 근데 그게 불과 한 달도 못 되서 그 돈이 종잇조각이 되었단 말이야 [...] 전쟁노병들이 너무 한심해서 그 돈 들고 시당에 찾아가 향의했다 그래요 노병들이라는게 그저 국가에서 쌀 600, 돈 60원 정해져 있어요. 60원 어디다 써요 [...]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어요”(부천, 2018.10.14., 남성 2).

이데올로기가 제시하는 유토피아와 현실 간의 괴리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강화되는 사회통제 구속력 저하는 양방향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인터뷰에서와 같이 국가가 제시하는 이데올로기를 신봉해야만 하는 당위성의 상실에 따른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통제를 실행하는 당조직 부패와 사상이완에 따른 구속력 저하이다. 북한의 당조직은 ‘개인에 대한 항시적인 총체적 통제’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북한의 모든 인민은 당조직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당조직의 전반적 위상은 낮아지고,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다. 김정일은 “사회의 당 조직들이 맥을 추지 못하고 당 사업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sup>18)</sup> 이는 배급제 붕괴로 인해 당조직의 위상과 권위가 약화된 현실에 대한 지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당조직 위상 저하는 비단 배급제 붕괴에 따른 당위성 약화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 배급제가 붕괴되자 북한에서는 비공식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관료들의 부패도 함께 증가하였다.<sup>19)</sup> 사

---

17) Leonard Schapiro, *Totalitarianism*(London: The Pall Mall Press, 1972), p.117.

18)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1996년 12월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월간조선』, 4월호(1997), 306~317쪽.

19) 김종욱, “북한의 관료부패와 지배구조의 변동,” 『통일정책연구』, 17권 1호(2008), 375쪽.

상영역 통제의 핵심기관인 당조직 부정부패는 결국 대중에 대한 사상영역 사회통제 구속력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 2) 사상영역 사회통제의 변화

### (1) 이데올로기의 변화: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

린츠와 스테판은 후기전체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정권이 갖는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북한에 적용해 보면 권력을 승계받은 김정은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권력이 세습에 의해 정당화 되었다는 점에서 비판과 전환이 아닌 계승과 발전을 통해 과거의 이데올로기를 지속해야하는 동시에,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이완된 사상적 통제기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습된 권력에 대한 정당성 확보는 과거 김정일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과제였다. 선군사상의 등장과 발전 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주지하듯 김정일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선군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고안하였다. 2002년 10월 5일 『노동신문』은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한 사상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나온 혁명사상”이라는 표현으로 주체사상과의 관계를 설명했다.<sup>20)</sup> 또한 2003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선군사상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이며 공화국의 룡성번영을 위한 백전백승의 기치”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선군사상의 정식화·체계화 작업은 주체사상을

---

20) 진희관, “북한에서 ‘선군’의 등장과 선군사상이 갖는 함의,” 『국제정치논총』, 48권 1호(2008), 389쪽 재인용.

계승·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21)</sup>

김정은 시대에 제창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 적용되었다. 김정은은 2012년 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공식화하고 정식화·체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주체사상에서부터 선군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로의 변화는 선대의 사상·이론·방법을 정식화·체계화했다는 측면에서 세습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과거 김정일이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를 발간하며 김일성주의를 정식화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했듯이,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곧 김일성이 주창하고 “김정일동지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사상과 이론들”<sup>22)</sup>을 체계화함으로써 권력 승계를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은 김정은 시대 북한인민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이데올로기와 현실 간의 괴리를 경험한 이들이 이에 순응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정은 시대에는 새로운 변화가 관찰된다. 과거 북한 이데올로기가 당과 인민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이데올로기였다면, 김정은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수령중심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지속함과 동시에 인민들과의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새로이 제기한 ‘김정일애국주의’에서 잘 나타난다. 김정은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에서 조선노동당이 인민을 위해 진심으로 복무할 때 비로소 인민이 조선

---

21) 『노동신문』, 2003년 1월 1일.

22) 외국문출판사, 『위인 김정일』(평양: 외국문출판사, 2012), 356쪽.

노동당을 진심으로 지지할 것이고, 이러한 ‘당과 인민의 단결’이 이룩  
돼야만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도 가능하다며 간부들의 술선수법을 강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일군들이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며 발이  
달도록 뛰고 또 뛰여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에게 유족  
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면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심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는 로동당만세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sup>23)</sup>

위와 같은 특징은 ‘인민대중제일주의’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연설에서 “위대한 김일  
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  
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입니다”라고 언급 후 2016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전면화하였으며, “인  
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  
우선, 절대시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sup>24)</sup> 요컨대 이는 정권이 인민에  
게 일상생활에서의 물질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인민들에게 합리적 순  
응을 이끌어내는 전략이라 볼 수 있다.<sup>25)</sup>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폭력과 억압은 생산적 방법이라 할 수

---

23)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2015), 18~19쪽.

24) 김정은,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  
위 연설”; 김정은 2016년 5월 7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25) ‘합리적 순응’의 개념은 임지현의 것을 차용하였다. 임지현·김용우, 『대중독  
재 1』(서울: 책세상, 2004), 35쪽.

없다. 억압은 아래로부터의 지지와 성원을 기대할 수 없고, 동요세력에 대한 소외를 생산해낸다. 권력의 입장에서는 체제에 순응하도록 적절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 그 어떠한 효과적 폭력보다 효율적이다.<sup>26)</sup> 독재나 민주주의를 불문하고 모든 체제는 권력이 요구하는 역할에 맞추어 개인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구축하고, 개인이 집단적 주체성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정교한 정치공학을 구현할 때 성공한다.<sup>27)</sup> 김정은 정권의 이데올로기는 이 정치공학을 성공시키기 위해 물질필요를 인민에게 제공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의 이데올로기는 ‘강제와 동의’가 배합된 사회통제 기제라 할 수 있다.

## (2) 변화된 이데올로기의 실천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 국한될 경우 그 함의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인민대중에게 합리적 순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실질적 행보가 필요하다. 이는 김정은의 현지도와 리더십, 신년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김정은은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643회의 현지도를 감행했다. 그중 2012년 한해를 제외하면 경제민생분야가 정치군사 분야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군사 비중은 집권 1년 차에 약 30.6%에서 4년 차에 15.3%로 감소한 반면, 경제민생분야는 집권 1년 차에 40%에서 4년 차는 57.14%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sup>28)</sup> 또한 김정일과 달리 유희장, 공원, 백화점이나 병원

---

26) 임지현·김용우, 위의 책, 18~19쪽.

27) 임지현·김용우, 위의 책, 19쪽.

28) 정유석·곽은경, “김정은 현지도에 나타난 북한의 상징정치,” 『현대북한연구』, 18권 3호(2015), 184쪽.

및 의료시설, 애육원 및 양로원 현지도도를 하고, 2012년 10월에는 북한 전역 보육원에 꿀을 보냄<sup>29)</sup>으로써 인민친화적 리더십을 선보였으며, 신년사 연설이나 전국노병대회 현지도도에서는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2018년 9월에는 평양김책공업종합대학 현지도도 중 인민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신년사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언행들을 살펴볼 수 있다. 김정은은 2013년 신년사부터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생활향상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인민군장병’, ‘온 나라 전체 인민들’, ‘동포형제’를 비롯하여 2015년에는 ‘어린이’, 2016년에는 ‘전체 조선인민’에게 ‘사랑’이라는 표현을 가감 없이 사용했다. 2017년 신년사부터는 단순히 ‘사랑’이라는 표현을 넘어 “전체 조선인민에게 가장 숭엄한 마음으로 뜨거운 인사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의 영광과 축복을 삼가 드립니다”라며 경어를 사용했다. 신년사 후미부분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 맹약하는 바입니다”라고 언급하며, 수령을 인민의 심부름꾼으로 묘사했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물론 실천 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인민대중의 전면적 동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김정일애국주의나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이에 따른 변화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그 내용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대상자가 “형식적 혹은 허공에 뜬

---

29) 정유석·곽은경, 위의 글, 183쪽.

말” 등으로 표현하는 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답변이 평양이나 지방, 혹은 경제력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김정은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인민대중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부정적 경험과 관념이 강력히 작용한 결과로 보이며, 변화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효과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민들에게 경험적으로 축적된 후 정밀한 측정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된다.

“김정은이가 김일성이처럼 그런 정치를 좀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일이는 차를 타고 나가다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 김일성이가 사람들 품에 안고 악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런 품격을 가지고 그러더라고요”(서울, 2018.9.29., 여성 1).

“김정일 애국주의 [...] 이게 나온 배경이 제 생각으로는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칭송하기 위해서 나온 형식적 말투 같고요. 거기서 내용을 기대할 게 하나도 없고 그런 게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서울, 2018.9.29., 남성 2).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해 명백히 말씀드릴 것은 거기서 인민대중 중심이라고 하는 그 말이 북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주 허공에 뜬 이런 걸로 밖에는 [...] 거의 모든 사람들은 쓸데없는 건설만 한다고 생각해요”(서울, 2018.9.29., 남성 1).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변화된 통제 기제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변화 자체를 밝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평가’ 들에도 불구하고 시도의 차원에서는 그 함의가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김정은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가 단순히 체제유지만을 위한 사회통제 정책인지, 혹은 인민대중을 위한 실제적 변화의 시작인지 여부는 추후의 연구 과제라 하겠다. 일단 본고에서 밝히고자 한 것은 북한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그들의 사상적 통제 기제를 ‘강제’에서 ‘강제와 동의’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 4. 생활영역 사회통제 변화

##### 1) 계획경제 및 배급제 붕괴

계획경제와 배급제 붕괴는 전체주의적 사회통제 기제 약화로 귀결된다. 계획경제 붕괴는 비공식경제 발달과 이에 따른 빈부격차를 발생시킨다. 빈부격차는 사회구성원의 박탈감과 불만을 증가시킨다.<sup>30)</sup> 이 순환고리에 따라서 개인은 집단에 복종해야 할 이유를 점차 잃어간다. 배급제가 붕괴되었다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영역에서 가장 큰 통제기제가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마당의 활성화는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의존도를 현격히 저하시켰다. 신흥자본계급의 등장과 빈부격차는 사회주의국가의 인민들에게 박탈감을 제공했다.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적 계층정책은 국가가 성분에 따른 차별적 혜택을 제공할 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퇴색되었다. 통제를 담당하는 기층조직들도 일상생

---

30)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양문수 편저, 『김정은시대의 경제와 사회,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서울: 한울아카데미, 2014), 342쪽.

활을 영위해야 했기에, 그들이 가진 통제 권한을 뇌물로 바꾸는 데 사용했다. 즉 생활영역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는 전체주의 사회통제 기제가 1990년대 이후 점차 퇴색되어 간 것이다.

(빈부격차) “있는 사람들은 보여주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은 부러워하면서 많이 분노를 자아내죠. 저것들은 잘살고 간부들 다 끼고 못된 짓 불법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쪼끔만 잘못해도 죽이겠다 하고 그런 건 너무 다수고”(부산, 2018.10.3., 남성 2).

(출신성분) “출신성분은 일단 저는 못 느끼고 살았어요. 출신성분이 어느 정도 나쁘면 잘 모르겠는데 사실 출신성분 때문에 뭘 못 하는 건 없어요. 출신성분이 어느 정도 나빠야 하나면 전쟁 때 국군의 편을 들었거나 하는 [...] 이 사람들 한 개도 걸리는 게 없어요. 다해요. 딱 하나 걸리는 게 중앙당이 안 돼요. 당기관이 안 되고 사법경찰기관이 안 돼요. 사실 그냥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서울, 2018.9.29., 남성 2).

(생활총화) “하기는 계속 해요 그저 너무 형식이다 보니까 [...] 시나도에서 검열해요. [...] 근데 내가 책임자하고 담배나 하나 피우고 기록해 놔라 하면 돼요. [...] 생활총화도 하나 써서 똑같은 내용을 [...] 그냥 읽어요. 그저 이번 주는 이거 읽었다 저번 주에는 이거 읽었다 [...] 나도 생활총화 해본 지 오래입니다. 돈만 바치면 [...] 굉장히 흐름이 그래요. 그러나 대학생들, 예술부문들 돌격대라든가 군대라든가 한 주에 한 개씩 유지되요.[...]”(부천, 2018.10.14., 남성 2).

전체주의 사회통제 기제의 약화는 북한 사회에 부정부패, 뇌물, 각

종 범죄를 낳았다. 범죄 현상이 만연한 사회는 또 다시 사회적 일탈과 도덕적 타락을 가속화하는 고리로 작용했다. 사회주의 미풍양속, 엄격한 부화방탕죄 처벌 등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던 북한의 사회상이 급격히 무너진 것이다.<sup>31)</sup>

이 같은 맥락은 ‘동원’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은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전후로 70일전투와 200일전투를 추진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동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전 시대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첫째는 과거 북한이 ‘집단적 영웅주의’ 혹은 ‘전 인민들의 노력경쟁운동’이라는 구도로 동원을 추진했다면, 김정은 시대의 동원은 ‘강제와 동의’가 적절하게 조합된 구도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사상영역 통제에서 살펴 보았듯 “수령인 자신이 하는 행위는 모두 인민들을 위한 것이며, 이것은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동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sup>32)</sup> 두 번째 차이점은 대중이 동원에 대해 형식적으로 따르고 있지만, 전체주의체제에서와 같이 열성적이거나 경쟁적인 태도로 참석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 인터뷰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은 관찰된다.

“동원은 많아졌어요 근데 동원 잘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참석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 학습 이런 거 하고 [...] 돈 있는 사람은 뭐 안 나와도 돼죠. [...] 일당 2만 원, 3만 원 주면 안 나가도 되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도 [...] 70일전투 했거든요? 아무 전투 안 할 때는 한 달에 50만 원 내고 집에서 놀았는데, 70일전투에는 강도가 좀

31) 강진웅, 『주체의 나라 북한』(서울: 오월의 봄, 2018), 230쪽.

32) 김창희, “북한의 자강력주제일주의와 인민노력동원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 논총』, 85권(2017), 107~108쪽.

다르니까 뭐 한 80만 원 정도 [...]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일 안 하죠”(부산, 2018.10.3., 남성 1).

결과적으로, 국가발전 원동력으로 활용해 온 동원에서조차 통제가 약화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 과거 조직생활 강화와 함께 국가 생산력 증대를 위한 동원에 강제적이며 경쟁적으로 투입시키던 유형의 사회통제가, 일정 부분의 설득과 동의 기제를 활용한 통제로 변화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 2) 생활영역 사회통제 변화

### (1) 인민생활·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강화

김정은 정권의 사회발전 목표는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로 압축된다.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은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하여 교육, 보건, 체육 분야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지는 것을 의미한다.<sup>33)</sup> 김정은은 ‘사회주의 문명국’에 대해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라고 정의했다.<sup>34)</sup> 이는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누리는’ 인민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인민’이라는 의미로, 보상을 통한 사회통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33) 정연선, “김정은 체제의 사회문화 정책,” 『김정은 체제 5년, 북한을 진단한다』(서울: 늘봄플러스, 2016), 167쪽.

34) “우리의 사회주의문명국,” 『노동신문』, 2013년 1월 17일.

보상과 통제의 논리구조는 2016년 김정은 신년사의 다음과 같은 표현들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우리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 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농산, 축산, 수산부문에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최첨단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하여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의 정치적 생명과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봐주어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

한편, 신년사에서 언급되었던 인민생활과 관련된 사안들은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발표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되어 하달된다. 제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첫째, 인민경제 전반의 활성화, 둘째, 경제 부문 사이의 균형 보장, 셋째,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토대 마련이다.<sup>35)</sup> 이는 인민생활향상을 실천적 차원인 정책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순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통제 기제라 할 수 있다.

## (2) 복지·문화시설 설립

사회주의문명국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노력은 실제 정책에서도 관찰된다. 평양 시내에는 인민극장, 룡라인민유원지, 개선청년공원유치장, 룡라곱등어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미림승마구락부, 해당화관

---

35)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2016.5.7.).

등이 새롭게 건설되었다. 평양시의 중심거리인 창전거리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2015년에는 중구역 고층아파트, 2016년에는 ‘위성과학자거리’ 등의 대규모 건축물이 세워졌다.<sup>36)</sup>

김정은이 국가정책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은 평양과 지방 사이의 생활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시장화에 따라 전국의 도시에는 고소득층이 등장했으나, 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함에 따라 지방인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2013년부터 김정은은 신의주·함흥·혜산·사리원·원산·평성 등 각 지역 주요 도시들에 공원과 유원지, 오락시설, 물놀이장 등을 신설했다.<sup>37)</sup>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육아원과 애육원의 건설이다. 2016년 『노동신문』 보도를 분석해 보면 육아원과 애육원 건설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애육원과 보육원은 평안남도 평성, 자강도 강계, 황해북도 사리원을 비롯하여 함경남북도, 남포 등 각 도들에서 지어지고 있다.<sup>38)</sup> 이 가운데 김정은은 2016년 신년사를 발표한 후 평양육아원·애육원 방문을 첫 현지지도 장소로 선택할 만큼 애민정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sup>39)</sup> 생활영역에 대한 통제에서 보상적 기제는 실제 인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층에 따라 부정적 인식도 공존한다.

---

36) 정연신, “김정은 체제의 사회문화 정책,” 168~169쪽.

37) 정은미,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사회 변화와 주민생활,” 『김정은 체제 5년, 북한을 진단한다』(서울: 늘봄플러스, 2016), 189쪽.

38)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자, 황해남도, 황해북도, 남포시군중대회 진행,” 『노동신문』 2016년 1월 9일.

39) 정은미,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사회 변화와 주민생활,” 184쪽.

“그걸 볼 때는 [...] 김일성이를 내놓고 김정은이를 솔직히 [...] 왜 그런가하면 우리 도마다 쪽 가면 건물이 제일 멋있고, 눈에 확 띄는 것이 애육원이 그리고 양로원이라든가 그걸 볼 때 인민들을 위해서 좀 새로운 정치가 좀 시작되고 그런 걸 느끼거든요. 저 김정은이는 아버지 때하고 달라서 인민들 생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인천, 2018.10.7., 남성 1).

“놀이장 건설하고 [...] 그것은 형식상 자기가 좋다고 사람들이 손들게끔 하는 기만술에 불과하죠. 우리 혜산에는 암록원이라고 건설했거든요? 놀이방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그 뭐 양강도 군인들이 건설했거든요? 한 5층짜리 건물인데 [...] 젊은 사람들하고 어린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저는 안 가 봤어요. 원하는 시간에 돈만 있으면 가서 놀죠”(인천, 2018.10.7., 남성 2).

“애육원이요 거 부모 없는 아들 위해서 [...] 실제 공급은 좋아요. [...] 공사에 동원돼서 일했는데 매일 고기반찬을 주고 간식도 주고 아들 잘 먹어요. [...] 애육원에 있는 아들은 다 무력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국가가 인원을 손안에 쥐고 통제할 수 있는 아들이에요. [...] 양강도 체육관 하나 있는데, 거기 돈 내야 되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그게 쳐다만 볼 뿐이지 그게 들어도 못 가요”(부천, 2018.10.14., 남성 2).

“하층인민들한테는 그게 별 달갑진 않아요. 그게 그 건설하느라 그 건설 자재랑 건설에 동원되는 노력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부천, 2018.10.14., 남성 3).

위와 같이, 부정적 인식의 원인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중산층 이하 인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생긴 상대적 박탈감, 건설의 주체로 자신들이 동원되면서 느꼈던 반감 등이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많은 인민들이 복지·문화시설이라는 결과물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생활여건 개선이 김정은의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북한 인민들의 근면이나 자본력에 기인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북한이탈주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록 제한적이거나 북한 인민들의 생활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통제 기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보상을 통한 인민들의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통제 영역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3)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장마당에 대한 통제 변화

보상을 통한 사회통제 기제는 경제부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지침 중 하나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장마당에 대한 통제 변화를 살펴본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공식화하였다.<sup>40)</sup> 2013년 5월 15일 자 『조선신보』는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작년부터 일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이 내각의 지도 밑에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경영관리를 하는 새로운 조치들

---

40) 김석진, “북한의 '경제관리방법' 개혁 동향과 전망,” 『김정은시대의 경제와 사회,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서울: 한울아카데미, 2014), 18쪽.

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sup>41)</sup> 이후 2014년 1월 27일 자 『조선신보』에서는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농장에서 수확된 농산물 중 국가 납부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물로 분배받고, 자기 소비 몫 외의 농산물을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공업 분야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평양에 있는 3·26 전선공장의 사례를 들어 시범운영 상황을 소개했다.<sup>42)</sup>

“공장들에서는 국가계획을 수행하면서도 여러 대상들과 자체의 결심으로 생산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 그 전에는 수익의 사용용도가 항목마다 엄격히 규정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조치에 의해 리득의 일부를 규정에 맞게 국가에 납부하면 나머지는 자체의 결심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작년 8월부터 생활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렸다. 현재는 작년의 20~30배 수준이다. 국가에서 규정된 생활비(월급)만이 차례지던 종전과 달리 로동자들이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이다.”<sup>43)</sup>

2013년 4월 24일 자 『조선신보』에서는 새로운 조치의 핵심이 한마디로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즉, 계획 수립·생산·제품 및 수익의 처분에 대한 기업 권한을 대폭 확

---

41)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양문수 편저, 『김정은시대의 경제와 사회,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서울: 한울아카데미, 2014), 61쪽.

42) 양문수, 위의 글, 63~64쪽.

43) “평양 3.26 전선공장에서 보는 경제관리의 새 시도,” 『조선신보』, 2013년 4월 24일.

대한 것이다.<sup>44)</sup> 이러한 국영기업 개혁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의 개혁 기조인 ‘방권양리(放權讓利)’와 유사하다. ‘방권’이란 계획 범위를 축소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체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고, ‘양리’는 국가 상납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공하는 원리이다. 중국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 국영기업을 통해 이와 같은 원리를 실현함으로써 긍정적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sup>45)</sup>

북한이탈주민 인터뷰에서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통해 독자 경영체제를 일정 부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세금의 명목으로 수탈하는 양이 너무 많아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포전담당제라는게 말이 다를 뿐이지 개인 경영제나 같기 때문에 이만큼은 국가에 내고 남은 거는 너 가지라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생산할 수 없는 농산량이거든요. 처음에 진짜 좋은 정책이다 해가지고 진짜 밤 12시까지 돈 꾸고 비료 주고 다 했거든요? 근데 생산물이 나왔는데 기준치보다 적거든요”(부산, 2018.10.3., 남성 1).

“포전담당제 그거는 그대로 실사가 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실시한다고 하면서 이윤이 나면 쥐야 하는데 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서울, 2018.9.29., 남성 3).

---

44)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63~64쪽.

45) 김석진, “북한의 ‘경제관리방법’ 개혁 동향과 전망,” 21~23쪽.

그러나 정책 결과와 상관없이 김정은 정권에서 독자 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수익에 관한 처분권한을 일정 부분 양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경영권한과 수익에 대한 처분권을 일정 부분 양도하는 것 또한 보상을 통한 사회통제 기제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살펴보자. 북한은 사경제·사기업에 대해 억압과 묵인 정책을 주기적으로 번갈아 사용해 왔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묵인과 허용의 정책기조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sup>46)</sup> 김정은 시대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기본 방향은 북한의 현실과 공식 제도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일정 부분 메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주요 골자는 과거 불법·반합법적으로 진행되었던 활동을 상당 부분 합법의 영역으로 진입시키고, 시장을 더욱 활발히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다분히 ‘시장친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성과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sup>47)</sup> 장마당에서 인민들이 느끼는 통제에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된다.

“2017년도 초인가 넘어오기 넉 달 전에 내적으로 방침이 내려왔는데  
법일꾼용으로 [...] 차판장사들 너무 단속하지 말라고 1부류 방침으로 내

---

46) 양문수, “2013년 상반기 북한의 시장 동향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 (2013), 50~52쪽.

47) 양문수, “시장화 측면에서의 김정은 체제 5년,” 『김정은 체제 5년, 북한을 진단한다』(서울: 늘봄플러스, 2016), 118~124쪽.

러왔거든요? 그다음부터 차판장사가 막 이렇게 되었고”(부산, 2018.10.3., 남성 1).

“고난의 행군 때는 장마당이 있었는데 그때는 건물을 못 썼어요. 길거리나 강에 앉아서 팔았거든요? 그게 2000년도쯤에 장마당 건설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늘어나고 하니까 좀 더 큰 데로 옮겨놓고 팔아요. 최근에는 차를 이용하죠. 조금 통제가 허술해졌다고 봐야죠.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개인 이름으로는 등록 못해요. 개인 소유로 쓸 수는 있거든요. 그 차가지고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체로 화물차”(부천, 2018.10.14., 남성 3).

물론 아직까지 장마당에 대한 통제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며, 통제 권한을 가진 간부층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통제를 활용하는 상황이 공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의식에 관련된 필수물자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이완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마당에서 모든 것을 구매해요. 장마당에 대한 변화는 김정은이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장마당에서 장세 걷는 게 북한에서 돈이 꽤 되거든요. 시정부가 장마당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관리비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아니면 한 명도 세지 않게 받아 내기 위해서 변화가 생겨요. 절대 장마당을 없애려고 하거나 [...] 하나도 없어요. 장마당에 대한 통제는 관리비에 대한 차원, 관리비를 누가 가지게 되느냐는 차원에서 통제가 변해 왔어요”(서울, 2018.9.29., 남성 2).

보상적 사회통제 기제는 경제부문에서도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도입과 장마당에 대한 일정 부분의 통제 완화조치는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실제 인민들의 생활향상과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생활영역에 대한 통제 부분에서의 보상 개념이 작동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에서 통제 완화의 실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 5. 행동영역 사회통제 변화

### 1) 법률을 이용한 통치(rule by law)로의 변화

현 시대 북한 법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로서 존재한다는 기본 명제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다. 그러나 북한 법은 2000년대에 들어 그 규모가 확대되고 세분화됨은 물론 현실을 반영하는 ‘살아 있는 법’으로써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물론 이 같은 변화는 권력 통제와 권리 보호를 의미하는 법치(rule of law)보다, 사회와 개인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라는 법제(rule by law)의 성격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수령과 당에 의한 자의적 통제를 제도화를 통해 완화해 가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sup>48)</sup>

이와 같은 변화는 중국의 정치 개혁 과정에서도 관찰된다. 중국 공산당은 1978년 12월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사

---

48) 조영남, 『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파주: 창비출판사, 2012), 32쪽.

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함께 '사회주의 민주 건설' 및 '사회주의 법제 완비'를 새로운 당 노선으로 확정했다. 이후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인치-법치 논쟁을 통해 '법제'가 '인치'를 대신하고 1980년대 법치-법제 논쟁을 통해 다시 '법치'가 '법제'를 대신하는 양상으로 변화해 왔다. 즉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의법치국이 아니라 이법치국(ruling the state by use of law)의 기틀에서 국가가 운영되었던 것이다. 1997년 제15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은 의법치국이 국가통치 방침이라고 선포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 수립을 정치개혁의 목표로 확정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국가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것은 사회주의법률관이 기본적으로 법 도구주의, 법 허무주의 위에서 있으며, 인치론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공산당 영도하의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4년 발표된 중국 한 학자의 법치 개념에 따르면, “법치는 현대국가를 통치하는 가장 좋은 길”이며, “법치란 인민이 집단의지와 집단이익을 체현하고 있는 법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다. 요컨대 여전히 진정한 법치라기보다는 법률을 이용한 통치(rule by law)에 가까운 관점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sup>49)</sup>

그러나 이와 같은 수단적 의미의 법치의 강화가 비록 국가로부터의 시민의 보호라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함의는 결코 적지 않다. 통치자 개인의 권위와 능력으로 국가를 통치한다는 의미의 '인치'는 자의적 국가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법치'는 '자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함으로써 장기적인 정치·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

49) 조영남, 위의 책, 48-69쪽.

것이다. 또한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통제의 제도화의 의의는 적지 않다. 실제 중국에서 1980년대 인치·법제 논쟁이 전개되었을 때, 학자들 간에 법제 개선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이유는 정치안정의 유지·사회주의 현대화 추동(특히 경제활동의 규범 제공), 민주의 법적 보장을 위해서는 법제 개선이 필요함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sup>50)</sup> 문혁의 정치적 혼란 종식과 재발방지, 법률제도의 정비와 집행을 통한 공산당 통치 안정성 확보, 시장경제와 사적 소유제도의 도입 등 개혁·개방의 정책 목표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제도화가 절실했다는 것이다.<sup>51)</sup> 이는 중국이 다양한 국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전체주의 사회통제 기제가 서서히 약화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제·법치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을 의미한다.

북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 들어 다양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는 형법이다. 1990년대 경제위기는 인민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사회주의체제 원칙에 반하는 일탈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인민들의 일탈이 가속화되자 정부는 공포정치 등 자의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통제만으로는 구성원의 행위를 통제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고, 새로운 사회통제가 필요하게 된 북한은 2004년 형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과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범죄규정화를 통해 이에 대처해 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 체계화, 현실화되지 못한 법치의 강화가 과잉범죄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나, 북한 형법은 사회변화에

---

50) 조영남, 위의 책, 51~52쪽.

51) 조영남, 위의 책, 86~87쪽.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2)</sup> 이러한 북한에서의 법제 개선 노력은 전체주의 사회통제 기제의 약화에 따른 새로운 통제방식, 즉 법제적 통제 기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일정 부분 가늠할 수 있었다.

“(김정은 시대에는) 법을 취급하는 상무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한 개 부서에서 보던 걸 이제는 조직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나올 때는 조항을 가지고 나와요.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공무죠. [...] 예전에도 있기는 했지만 3~4년 전부터 이것들이 세분화되었죠”(인천, 2018.10.7., 남성 2).

“김정은이 집권해가지고 방침이 엄청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회부분이나 보안부분에도 방침 전달이라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인천, 2018.10.7., 남성 1).

“김정은이가 최근에 내적으로 범죄자들을 인권적으로 때리지 말라고 계속 방침을 내렸다고 하더라고, 그전에는 군인도 때리고 나도 때리고 그랬는데 그게 많이 조심해졌다고 해요. 이런 것을 해서 자기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데 [...] 아직 바뀌지를 않았어요”(서울, 2018.10.6., 여성 1).

김정은 시대에는 단속에 대한 규정과 방침하달이 증가하였고, 시스템적 통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이 관찰되지만, 이 노력들이 사회

---

52) 황의정, “북한의 주민 일상에 대한 법적 통제 :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범죄규정화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1권 1호(2017), 143~144쪽.

저변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단속·통제 분야에서 부패와 뇌물이 저변에 확산되어 있고, 이것이 실제 단속을 수행하는 인원들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기간 북한 사회통제의 제도화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할 지라도 자의적 통제에서 법제적 통제로의 변화가 관찰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하다는 판단이다.

## 2) 공포정치의 이원화

김정은이 집권한 뒤 북한의 공포정치 양상은 변화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장성택 처형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김정은은 김정일 보다 더욱 심한 공포감을 선사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과거와 달리 이원화의 길을 걷고 있다. 즉, 공포정치의 대상이 자신의 후계구도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유일영도체계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될 만한 인물로 일정 부분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공포정치의 이원화 전략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살은 김정일 때 보다 적어졌다고 봐야 돼요. 김정은 때 와서 장성택이나 정치권에 말려든 사람들은 좀 말려 죽었는데, 은하수 관현악단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다 정치권에 말려들어서. [...] 총적으로 인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살은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요”(인천, 2018.10.7., 남성 2)

“김정은 시대에 들어 장성택의 측근에 대한 제거가 시작되었죠. [...] 더욱이 충격받은 것은 현영철이 처형당한 것인데,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지요. 김정일 시대에는 그래도 처형방식이 죽이면서 하는 방식은 드물었어요. 처형은 주로 간부들 [...] 인민들에 대한 처형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간부들을 그렇게 처형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반정부모임이라든가 어떤 그룹을 형성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구요”(서울, 2018.9.29., 남성 1).

실제로 2016년에 이어 2017년 조사에서도 최근 들어 공개처형이 줄어들었다는 증언이 많이 수집되고 있는<sup>53)</sup>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공포정치의 이원화는 공포정치의 대상을 집중시켜 자의적 통제를 축소했으나, 파급효과를 키움으로써 효과적인 통제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6. 결론

김정은 시대 북한은 정권이 인민에게 ‘물적필요’를 제공함으로써 인민들을 체제에 효과적으로 순응시키는 전략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상영역 통제 분야에서는 인민생활향상에 중점을 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공식화하고 이를 김정은이 실천하는 모습을 인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생활영역 통제 분야에서는 장마당에 대한 통제 완화, 인민생활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 애육원·양로원·각종 놀이시설 등을 건설하는 정책 등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동영역 통제 분야에서는 법률을 이용한 통

---

53)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엮음, 『북한인권백서 2017』(서울: 통일연구원, 2017), 57~58쪽.

치로의 변화양상과 공포정치의 이원화가 관찰된다.

요컨대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에서 강제적·강압적·자의적인 성격이 강한 부정적 사회통제에서, 동의적·보상적·법제적인 성격이 강한 긍정적 사회통제로의 일정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통제는 사회구성원인 피지배자들의 이탈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를 통합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사회통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유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통제 유형을 연구함으로써 체제의 특성과 유형을 가늠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 하겠다.

■ 접수: 10월 31일 / 수정: 12월 3일 / 채택: 12월 7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김정은, 『김정일에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_\_\_\_\_,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김정일, 『김정일선집』.

외국문출판사, 『위인 김정일』(평양: 외국문출판사, 2012).

#### 2) 신문

“우리의 사회주의문명국,” 『노동신문』, 2013년 1월 17일.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올리자, 황해남도, 황해북도, 남포시군중대회 진행,” 『노동신문』 2016년 1월 9일.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 연설,” 『노동신문』,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노동신문』, 2016년 5월 7일.

“평양 3.26 전선공장에서 보는 경제관리의 새 시도,” 『조선신보』, 2013년 4월 24일.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강진웅, 『주체의 나라 북한』(서울: 오월의 봄, 2018).

박영신, 『사회학이론과 현실인식』(서울: 민영사, 1990).

심영희·전병재, 『사회통제의 이론과 현실』(서울: 나남출판, 2000).

양문수, 『김정은 체제 5년, 북한을 진단한다』(서울: 늘봄플러스, 2016).  
 \_\_\_\_\_, 『김정은시대의 경제와 사회,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서울: 한올아카데미, 2014).  
 이우영, 『북한 도시 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서울: 한올아카데미, 2008).  
 임지현·김용우 엮음, 『대중독재1』(서울: 책세상, 2004).  
 조영남, 『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과주: 창비출판사, 201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엮음, 『북한인권백서 2017』(서울: 통일연구원, 2017).

## 2) 논문

김봉수, “장마당이 북한 주민생활에 미친 시대별 영향 분석”(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김중욱, “북한의 관료부패와 지배구조의 변동: ‘고난의 행군’기간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7권 1호(2008), 371~400쪽.  
 김진환, “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2013), 29~56쪽.  
 김창희, “북한의 자강력주제일주의와 인민노력동원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85권(2017), 99~121쪽.  
 배영애, “김정은 시대의 현지도의 특성 연구,” 『통일전략』, 15권 4호(2015), 129~166쪽.  
 안경모, “북한급변사태 논의의 역설: 간과된 변수로의 ‘북한,’” 『국제관계연구』, 21권 2호, 31~60쪽.  
 양문수, “2013년 상반기 북한의 시장 동향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2013), 49~64쪽.  
 오경섭, “북한 전체주의 사회통제와 체제내구성,” 『세종정책연구』, 5권 2호(2009), 217~259쪽.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1996년 12월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월간조선』, 1997년 4월호(1997), 306~317쪽.

-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99권 11호 (1999), 1~98쪽.
- 정영철, “북한 사회통제 메카니즘의 변화와 특징,” 『통일문제연구』, 9권 2호 (1997), 51~74쪽.
- 정유석·곽은경, “김정은 현지지도에 나타난 북한의 상징정치,” 『현대북한연구』, 18권 3호(2015), 156~224쪽.
- 진희관, “북한에서 ‘선군’의 등장과 선군사상이 갖는 함의,” 『국제정치논총』, 48권 1호(2008), 375~403쪽.
- 황의정, “북한의 주민 일상에 대한 법적 통제: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범죄규정화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1권 1호(2017), 115~149쪽.

### 3. 국외 자료

#### 1) 단행본

- Choi, Soo Young,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Ph.D. Thesis (Northern University USA, 1992).
- Friedrich, Carl J.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4th ed.(New York: Praeger, 1964).
- Linz, Juan J.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Washington D.C.: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 Rose, Arnold M., *Sociology the study of human relations*(New York: Alfred A. Knopf, 1957).
- Schapiro, Leonard, *Totalitarianism*(London: The Pall Mall Press, 1972).

# A Study on the Change of North Korea's Social Control Type in the Kim Jong-un Era: From Totalitarianism to Post-Totalitarianism

Kim Wooyoung(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hn Kyung-Mo(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How did the North Korea secure the stability of the system” since the 1990s, and tried to find the answer by analyzing the changes in social control type. In the totalitarianism, North Korea has secured the stability of the system by using the negative social control mechanism of coercive and arbitrary type. However, since the 1990s, the famine and the planned economic collapse have weakened the totalitarian social control mechanism of North Korea. This situation changed North Korea into a post-totalitarianism regime. In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 is striving to secure system stability by strengthening positive social control mechanisms such as consensual, compensatory, and Legalistic

type,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late totalitarian social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se environmental changes.

Keywords: North Korea, Kim Jong-un, Totalitarianism, Post-Totalitarianism, positive social control, negative social control